
 금융위원회		보 도 자 료			 금융감독원	
보도		2016.6.13(월) 조간 이후		배포	2016.6.10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 (02-2100-2680)			담 당 자	공정시장과 이동욱 사무관(02-2100-2681) 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83)	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정 용 원 (02-3145-7700)				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정규성 부국장(02-3145-7702)	

제 목 :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

"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제위 再심사 통과(6.10)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"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: 임종룡)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

○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,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

□ 이에,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, 대우조선해양 빅배스 (Big-bath) 문제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 「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 중 (‘15.10.28)

○ 이와 함께,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*를 보완

*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,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등

□ 이중 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,

○ 지난 3.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*를 받았으나,

*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

○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재심사 청구(5.30)한 바, 금번 6.10일 규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됨

□ 정부는 기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,

○ 회계법인 등이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하도록 소신있는 감사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환경을 조성하고, 분식회계를 사전 억제하는 감사시스템의 효율적 개편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

○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「회계투명성 및 신뢰성(책임성) 강화방안(假)」을 마련할 계획

<부실감사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현황>

현행법 ▶ 지정감사제 운영 ▶ 감리보고서 감리 ▶ 동일감사인 3년간 유지 ▶ 비감사 영역 제한 ▶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	외감법 전부개정안 ▶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 ▶ 감사품질 관리강화 ▶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▶ F/S 대리작성 요청금지 ▶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	수주산업 회계투명성 ▶ 원가추정 합리성 제고 및 임의적 회계처리 제한 ▶ 주요 사업장별 회계처리 정보공시 강화 ▶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	추가 방 안 + 마 련
감사인 도덕적 해이 ▶ 피감회사 주식거래 금지 ▶ 내부 모니터링 운용 강화 ▶ 직업윤리 교육확대	감리효율성 ▶ 금감원 직접감리 대상확대 ▶ 위탁감리 공정성 강화	회계감독 강화 ▶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확대 ▶ 내부고발제 활성화 유도 ▶ 회사 감사조직 책임 강화 ▶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▶ 분식회계 테마감리 강화	

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(6.10)

- 회계법인간 저가수입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·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
 -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, 저가수입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

⇒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

-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(3.25, 이하 규개위)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(외감법)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, 규제 적정성을 보완*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수정안이 원안통과됨 (6.10)

*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며,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함

<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관리책임>

구 분	당 초	수정안	
제재범위	모든 외감회사	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 (예: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)	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*
제재대상	모든 부실감사	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	

*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

- 상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'외감법 전부개정안'은 입법절차(법제처, 차관·국무회의)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제출 예정

2 추진중인 부실감사 방지 대책

- ◇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하고,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

1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

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

-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'품질관리기준*'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 의무 부과
 - * 경영진의 운영 책임, 윤리적 요구사항, 업무의 수입과 유지, 인적자원, 업무의 수행, 모니터링
- 동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

▶ 법령상 요구되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 및 시간 투입이 필요하므로 저가수입 및 부실감사 행위 등 억제 기대

②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

-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'감사' 또는 '감사위원회'로 이관
-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
-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 방지

▶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회계법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③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

- '유한회사'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
-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도입
- 외감법*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(분식금액의 10%, 최대 20억원) 신설

* (종래) 자본시장법에 따라 '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'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
→ (개선) 외감법에 따라 '사업보고서 미제출'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

<참고>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확대 (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중, 8월중 시행예정)

- (종래) 유사동종행위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 1건만 부과 (→최대 20억원)
→ (개선)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개별 부과하여 합산 (→Σ 20억원)

➡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회계규율을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경각심 제고

②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

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질벽 현상 방지

※ 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」 참고 ('15.10.28 금융위 보도자료)

- (회계) 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*하고, 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'수주산업 회계지침' 마련('15.12월)
- * 공시에정원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입법¹⁾ 회계처리를 허용하고,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회수법²⁾ 적용 지도
 - 1) 원가투입률을 공시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
 - 2) 발생한 원가 이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
- (공시)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 진행 현황·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공시량* 확대 ('16.5월)
- * 수주계약 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5% 이상인 주요 사업장별로 공시진행률, 미청구공사, 대손충당금 등 회계처리 정보 공시

- (감사) 감사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감사* 유도 및 감사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강화** (도입 완료)

* 수주산업 중요사항 핵심감사제('16.8월) 및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('15.12월)

** 분식회계 발생시, 회사내부 감사조직(감사위원회)에 대한 제재 부과 신설

- (감독)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테마감리* 실시 ('16.7월)

* ①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, ②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 따른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, ③ 한계기업 등의 영업현금 흐름 공시 적정성, ④ 유동·비유동 분류의 적정성

②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내부-외부 감독 강화

-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(시행령 개정 중)
- 회사가 회계부정 의혹 발생시 감독당국에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적극 신청할 있도록 감리 인센티브 부여
- 금감원내 대기업 등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('16.1월)

③ 회계감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

- 종래 상장기업만 금감원에서 감리하였으나,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도 금감원에서 감리
- 위탁감리(한공회)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 발생시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하여 취소·수정 요구 (→위탁감리 수정요구권 도입)
- 한공회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·선임 절차 등을 개선*하여 인적 구성의 공공성 확보 (외감법 시행령 개정 중)
- * 현재는 한공회 회장이 위탁감리위 구성 및 선임 등에 대해 모든 권한 행사

➡ 수주업계의 반복되는 회계질벽 현상을 차단하고, 회계감독 강화 및 감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

③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

① 회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사전차단

-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피감회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(한공회 규정 개정, '16.1월부터 시행 중)

구 분	< 현행 >	< 개선 >
(거래제한)	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	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
(신고대상)	Manager 직급 이상	모든 임직원

-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'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' 공시 ('1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)

② 감사인의 직업윤리 강화

-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과목*에 직업윤리 포함 및 상시적 직업 윤리 교육확대 (2시간→8시간)

* '17년 CPA 제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포함하여 출제할 예정

▶ 공인회계사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하고,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참고

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현행 회계감독 제도

구 분	제도	제도 개요
<기업측> (대상 : 상장 법인 +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)	내부회계 관리제도	<input type="checkbox"/>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을 마련 →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 후 감사보고서에 의견 표명
	재무제표 제출의무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('14년 7월 부터 시행, 비상장법인은 1년 유예)
	감사인선임 및 유지제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법인 : ① 3년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, ② 동일 이사 3년간 연속 감사 후 3년 제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상장법인 : 동일 이사 5년간 연속 감사 후 1년 제한 ※ ①동일 감사인 선임 '97년 도입, ②동일 이사 제한 '01년 도입 ③상장법인 의무교체(6년후)제도 도입('03년 법개정, '06년 시행), '11년 폐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외감법개정안) ①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: 회사 ⇒ 감사위원회, ②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적용 </div>
<감사인측>	비감사 용역 제한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감사용역* 제공금지 * ('03년 12월) ①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, ②내부감사업무의 대행, ③재무정보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, ④자산 매도 관련 실사가치평가 용역 등 ('16년 3월) 직무제한 업무 확대 : ①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, ②보험계리업무, ③민·형사 소송 자문업무
	감사인 지정제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* * ('90년 1월) 감사인 미선임, 감리결과 조치, 소유·경영 미분리 등 ('94년 4월) 상장예정법인 ('14년 11월) 재무기준(부채비율 과다 등),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
<관리감독>	감리제도	<input type="checkbox"/> (감사보고서 감리)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조사하고, 위반시 제재 <input type="checkbox"/> (품질관리 감리) 회계법인이 적절한 감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점점하는 감리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외감법개정안) ①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등 명시, ②품질관리 기준 위반시 공시 </div>
	제재 관련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조치 ○ (회사) 감사인지정, 증권발행제한, 담당임원 해임권고, 경고 등 ○ (감사인) 등록취소, 직무 전부·일부 정지, 회사 감사제한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(과징금)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한해 과징금 부과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외감법개정안)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도입(회계분식 금액의 10%, 최대 20억원) </div>